

주요 내용

■ 하반기 재정정책의 방향 및 보완 과제 ■

정책 방향: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축소 및 중산층 지원 대책 강화

-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재정수입 초과액(약 5조 원)을 재정적자 축소(2.5조 원)와 중산층·저소득층 보호(2.5조 원)에 각각 충당하기로 함

- 정부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통한 대외신인도 개선, 중산층 지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력 제고, 그리고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세 유지라는 정책 효과를 기대 함

- 재정확대 여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, 소비적 지출 및 적자 보전에 충당하여 적극적인 설비 투자 및 R&D 투자 진작에 소홀함

- 소비 증가에 비해 설비투자 회복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소비지출 증대만을 통한 경기 부양은 자칫 경기 회복의 지속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

보완 과제: 중기적 시각에서의 재정 운영 검토

- 재정 건전성 회복과 중산층 지원도 중요하지만, 중기적 안목에서 미래 성장잠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투자적 재정지출의 확대도 고려되어야 함

-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지 않으면, 저성장·고실업의 고착화 → 세수증대 곤란·사회보장비 지출 증가 → 만성적 재정적자 가능성이 있음

하반기 재정정책의 방향 및 보완과제

박 용 주

정책 방향: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축소 및 중산층 지원대책 강화

- (정책 기본 방향) 정부는 현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올해 예상되는 재정수입 초과액을 재정적자 축소와 중산층 및 저소득층 보호에 충당하기로 함
- (세부담 경감 및 소비적 재정지출 증가)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, 중산층 및 서민층을 대상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소비 확대를 유도
- (재정적자 축소) 국채를 조기 상환하여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

< 추가 재정수입과 추가재정 지출 계획 >

| 추가 재정 수입 | | | 추가 재정 지출 계획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세수 증가 | 내국세 | 3 조 | 세부담 경감 (봉급생활자) | 1.4 조 |
| | 관세 | △ 0.9 조 | | |
| | 순증 | 2.1 조 | | |
| 세외 수입 | 한은잉여금 | 0.5 조 | 재정지출 증가 (중산·서민층 대상) | 1.1 조 |
| | 98년도 결산 잉여금 | 0.6 조 | | |
| | 공기업 매각 | 1.8 조 | 국채 상환 | 2.5 조 |
| 합 계 | | 5 조 | | 5 조 |

자료: 재정경제원, 기획예산처

- (정책 기대 효과) 이상의 정책으로 정부는 재건전성 회복을 통한 대외신인도 개선, 사회적 통합력 제고, 그리고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세 유지라는 정책 효과를 기대
- (재정건전성 회복) 국채 조기상환을 통하여 통합재정 적자규모가 축소(GDP 대비 5% → 4.0%)될 전망이고, GDP 대비 국가 채무도 당초 목표인 20.2%(94조 5천억원)에서 19.1%(92조 5,000억원)으로 줄어들어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
- (사회적 통합력 제고) 그 동안의 구조조정과정상에서 붕괴될 위험에 직면한 중산

-
- 충을 보호하고,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통합력을 제고
 - (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세 유지) 감세 및 소비적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소비를 증진시킴으로써 경기회복세를 유지

문제점

- (정책의 전제 조건) 정부는 추가 재정수입 확대에 따른 재정책대 여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, 이를 소비적 지출 및 적자 보전에만 사용하는 등 소극적 재정정책을 구사하고 있음
 -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을 구사하기보다는 소비↑→투자↑→경기활성화라는 정책 scheme을 사용함
 - 그러나 현재의 경기회복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측면과 실물경제보다는 금융부문에, 또한 실물부문에서도 투자보다는 소비에 대한 의존이 크다는 취약성을 보임
- (소비적 지출 확대) 민간소비 증가에 비해 설비투자 회복세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중산층 지원 등 소비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방침은 경기의 거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
 - 이와 더불어 기업의 투자위축 등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소비 등 내수가 크게 증가할 경우 장기적인 인플레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
- (경제 교란요인 발생시 완충장치의 결여) 하반기 들어 예상치 못한 경제 교란이 발생 시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
 - 재정 여력의 용처를 성급히 결정하여 2차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을 남김
 - 빈번한 추경예산의 편성 관행은 재정의 투명성을 약화시켜 민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함

보완 과제

- (투자적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) 추가 재정지출 여력으로 성장 잠재력 배양을 위한 투자적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

- 최근 들어 기업의 설비투자는 부분적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, 이는 전년의 극심한 투자위축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함
 - 정부는 소비를 늘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기업은 투자 여력이 부족함
- (추가적 재정 부담 절감 여력의 효율적 활용)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으로 발생될 재정부담 절감분의 用處가 하반기 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효율적 사용 방안이 필요
 - 올 예산 편성시 국공채 이자부담을 13%로 책정하였으나 금리하향 안정화 추세에 따라 연간 국공채 이자율은 7%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
 - 이에 따라 변동금리부 조건으로 발행된 47.2조의 국공채 이자지급에 대한 절감분이 약 2조에 달할 것으로 보임
 - (중기적 시각에 따른 정책 운용이 필요) 따라서 재정적자의 예상 축소 분으로 당장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급한 시도¹⁾보다는 중기적 안목에서 현재의 설비투자 부족, 고급인력의 유출 등 미래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투자적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
 -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지 않으면, 저성장·고실업의 고착화 → 세수증대 곤란·사회비 지출 증가 → 만성적 재정적자 가능성이 있음
 - 최근 독일의 경우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세부담을 40~45% 경감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장기적 세수기반을 확대한다는 戰後 최대의 재정개혁을 단행 중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

(yjpark@hri.co.kr ☎ 724-4033)

1) 현 GDP 대비 5%대의 재정적자는 선진국과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누적국가채무액인 GDP대비 총부채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고려할 때 향후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상환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- 올해 우리 나라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20.2%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 반면, 일본은 108.5%, 미국은 57.2%, 영국은 56.2% 등으로 추정됨